

낙수효과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

홍운선 · 윤용석**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



- I. 서론
- II. 낙수효과 개념의 등장과 전개과정
- III. 낙수효과에 대한 접근방법 및 기존연구
- IV. 낙수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 기업별 통계를 활용하여
- V. 결론

* 접수일(2018년 5월 2일), 1차 수정일(2018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2018년 6월 29일)

** E-mail : 홍운선(wshong@kosbi.re.kr), 윤용석(ysyun@kosbi.re.kr)

논문초록

낙수효과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

홍운선 · 윤용석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낙수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논의는 낙수효과의 크기에 집중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낙수효과라는 개념의 형성과 전개과정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수효과라는 개념의 유래와 논리적 기반을 설명하고, 향후 낙수효과 측정 시의 주요 접근방법과 이를 위해 필요한 통계 등을 설명한다.

낙수효과의 논리적 기반은 경제의 전체 효용 합을 극대화하면 저소득층의 소득도 상승한다는 것으로서, 소득 격차보다는 절대적인 소득 증가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기반한다. 낙수효과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최소 1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낙수효과 개념은 그 동안 세계경제 상황과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시기별로 부침을 거듭해 왔지만, 신자유주의가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전개되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되어 왔다.

분석단계별로 구분하면, 거시적 분석, 산업별 분석, 기업별 분석이 가능하다. 거시적, 산업별 분석을 활용한 기존연구를 보면 낙수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시적 방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실증분석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통계를 활용한 미시적 방법을 토대로 낙수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협력단계가 길어질수록 낙수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수효과의 크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거래관계 분석보다는 시계열상의 추이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2015년 사이의 시계열 통계를 활용하여 측정한 본 연구의 기업별 분석결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석에 활용된 거래관계정보에 공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에 필요한 DB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진행 중인 주요 실태조사 자료를 소개하였다. 이를 활용한 통계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낙수효과, 신자유주의, 거시적 분석, 산업별 분석, 기업별 분석, 실증 분석

경제학 문헌분류

E65, O25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and Reality of Trickle-Down Effect

Woonsun Hong, Yongsuk Yun

As the economy sets in low-growth, attention is growing to the trickle-down effect. But most of the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size of the trickle-down effect. More importantly, it is the starting point and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concept of "trickle-down effect" but few studies have been performed on it. Accordingly, this study introduces the origin and rationale for the concept of trickle-down effect, explains the main approaches to measuring the effects of trickle-down effect, and the statistics required for them.

The rationale for the trickle-down effect is that if the economy maximizes the overall earnings, then the income of the lower class will also rise, based on a neoliberal social framework that places an absolute increase in income before the income gap. While the origin of the term "trickle-down effect" has been expressed in many ways in response to the origins of the term, it has been expanded in line with the most prosperou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U.S. over the past 100 years.

If divided into analysis levels, a macro analysis, industrial analysis, and a business-specific analysis are available. Advanced researches using macro and industry analysis show a decline the effect of trickle-down effect.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mixed in the analysis using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we make a empirical analysis the trickle-down effect based on the micro methods used in corporate statistics. The analysis showed that as the level of cooperation increases, have a diminished trickle-down effec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a time-series trend analysis rather than a point in time analysis, the corporate-specific analysis results measured using time-series(between 2008 and 2015) statistics are significant. However, there was a limit to the more rigorous analysis as the transaction-related information used in the analysis was full of blanks. As securing the DB required for analysis is necessary to enhance reliability, major factual survey data in progress are introduced.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is method is left as a task in the future.

Keywords

trickle-down effect, neoliberalism, macro analysis, industrial analysis, micro analysis, empirical analysis

JEL Classification

E65, 025

I. 서론¹⁾

최근 들어 낙수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낙수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점차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후자의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낙수효과 분석은 주로 기업별 통계를 활용한 실증분석이 중심이며, 낙수효과라는 개념의 형성배경에 대한 연구나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낙수효과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서 출발하여, 주요 국가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의 논쟁 과정에서 보듯이 철학적 접근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도 낙수효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역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정책을 통한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낙수효과에 대한 접근방법은 거시적 분석, 산업별 분석, 기업별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분석은 낙수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 차원의 관점에서 총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며, 산업별 분석은 대중소기업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낙수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산업별 분석은 파급효과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거시적 분석과 산업별 분석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문헌을 활용한다. 끝으로,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은 기업별 통계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분석이다. 미시적 분석에 의하면 낙수효과의 존재 유무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업재무통계를 활용하여 미시적인 낙수효과 크기를 분석하였는데, 거래단계가 길어질수록 낙수효과의 크기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 DB의 부족으로 인해 분석의 어려움이 있었다. 분석에 활용된 DB의 한계 및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낙수효과의 개념의 등장과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제 III 장에서는 낙수효과에 대한 접근방법과 측정을 위한 기존연구를 살펴본다. 제 IV 장에서는 기업별 통계를 활용한 낙수효과의 실증분석을 실시하며, 제 V 장 결론으로 끝맺는다.

1) 본 논문은 홍운선·윤용석(2017), 『낙수효과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연구원)를 요약 정리한 것임.

II. 낙수효과 개념의 등장과 전개과정

1. 낙수효과 개념의 등장

낙수효과 개념은 1700년대에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동체의 이익 촉진으로 연결되고, 반대로 공동체의 이익 역시 개인의 이익 확대로 귀결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에서 출발한다.²⁾ 이러한 사상은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이 출간되던 해(1776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약 100년 이상 생산과 인구, 물질적 풍요가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팽창했기 때문이다. 이는 ① 새로운 시장이 끊임없이 확장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 ② 팽창된 부를 통해 중산층을 창출해냄으로써 계급갈등의 지연, ③ 현재와 미래의 복지에 대한 일종의 확신을 만들어냈다.³⁾

낙수(trickle down) 효과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1896년 7월 9일, 미국 민주당의 정치인 윌리엄 브라이언이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낙수효과를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설이 있다. 브라이언은 당시 낙수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두 가지 발상의 정부가 있다. 부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leak through)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다수의 풍요가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브라이언이 비록 ‘낙수(trickle-down)’가 아닌 ‘누수(leak through)’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발상 및 용어 개념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브라이언이 낙수효과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인물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이 1904년 유행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세운 가설이 낙수효과의 기원이라는 설⁴⁾이다. 게오르그 짐멜은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면서 상층의 부가 충분히 축적되면 아래 계층으로 자연스럽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을 펴면서 유행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바로 이러한 짐멜의 해석이 경제 분야에 적용되어 낙수효과로 변형·발전되었다는 것이다. 그 외, 미국의 코미디언 윌 로저스가 제31대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정책을 비꼬면서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

2) Carr, E. H.(1964),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pp. 42-46, London: Macmillan.

3) Ibid.

4) 김민주(2011),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 법칙 101』, pp. 40-51, 위즈덤하우스.

대한다”고 언급한 것이 낙수효과의 기원이라는 설⁵⁾ 등이 있다.

상술한 낙수효과란 용어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어느 쪽이 낙수효과라는 용어 사용의 ‘원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낙수효과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던 시점이 최소 100년 이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편화작업을 거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낙수효과의 가장 단순한 논리는 경제의 전체 효용 합을 극대화하면 저소득층의 소득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수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소득 격차보다는 절대적인 소득 증가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니계수가 상승해도 자유경쟁과 국제 무역에 의해 빈곤층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올라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이러한 낙수효과 개념은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시기별로 부침을 거듭해 왔지만, 신자유주의가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전개되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되어 왔다.

2. 낙수효과 개념의 전개과정

가. 미국

낙수효과의 논리가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이며 소득세나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등 주로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이익 증대를 추구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낙수효과는 공급측 경제학의 중심 사상으로,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인 레이건 대통령(1981~1989), 부시 대통령(1989~1992) 등에서 강조되어 왔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커노믹스’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에 기반하고 있는 데, 이는 세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 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한 부시 대통령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황금의 60년대’라 불리는 케네디-존슨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 시기에 누진적 소득세와 경기부양책인 감세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특히, 존슨 대통령 때 진행된 미국판 복지국가 구상인 ‘Great society(위대한 사회)’ 정책⁷⁾에 의해 사회보장 정책이 큰 폭으로 확충되었다. 이러한 케

5) Keller, J.(2015), “The IMF Confirms That ‘Trickle-Down’ Economics Is, Indeed, a Joke”; 이한영(2016), 『너 이런 경제법칙 알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경제학 키워드 100』, 21세기 북스, pp. 8-35.

6) 山田久(2012, 7. 18), “『市場主義1.0』がもたらした不可逆的変化 サッチャー、レーガン、小泉改革の意味”, 다이아몬드·オンライン.

인지만 정책은 1960년대 미국 경제정책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확대, 대외적인 무역적자의 확대, 오일쇼크 등으로 1970년대에는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주류경제학이던 ‘케인지안 경제학’은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고, ‘공급측 경제학’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공급측 경제학’은 하버드대학의 Martin Feldstein 교수가 중심이 되어 감세에 의한 인센티브 효과를 주장한다. 이것은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는데, 중심 사고는 적정세율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⁷⁾ 이는 결과적으로 지나친 세금부과를 금기시키고, 낮은 세율을 정당화하여 고소득자 우대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면 중간소득자와 저소득자에게 성장의 과실이 퍼진다고 하는 “낙수효과 이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두 번의 세제개혁이 이뤄졌다. 1981년 제1차 세제개혁에서는 세율 인하를 주요 수단으로 하였으나, 이것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86년의 제2차 세제개혁에서는 과세 기준 확대와 세율 인하를 동시에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과세 기준 확대를 통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고, 최고세율 역시 28%까지 인하하였다. 이 개혁은 세율 인하에 의한 효율성 향상 외에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유층에 대해서도 적정 과세를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공평성까지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개혁으로 각 국의 세제 개혁 모델이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제2차 세계개혁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약간의 효율성 향상이 있었지만, 아주 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Auerbach and Slemrod, 1997)⁹⁾.

레이건 대통령의 제2차 세계개혁 이후에도 거액의 재정 적자는 계속되면서 1980년 후반에는 경제 상태가 악화되어 갔다. 게다가 낙수효과를 추구하는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경제 격차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역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낙수효과 개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낙수효과 이론은 신자유주의 및 시장원리주의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부터 창안된 경제 논리로서, 단순한 ‘진공 상태’가 아닌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하였다. 대처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 시행했던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

7) ‘Great Society(위대한 사회)’ 정책은 1965년 1월, 의회에서 존슨 대통령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교육지원, 질병퇴치, 메디케어, 도시정비, 미화, 보건, 낙후지역 개발, 빈곤퇴치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 범죄 및 비행 통제·예방, 투표권 제약요소 제거 등이 주요한 골자였다. 의회는 때때로 보완과 수정을 거쳐 존슨의 이러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법제화했다. 수백만에 이르는 노인층은 사회 보장법에 대한 1965년 메디케어 수정법안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출처: 주한미국대사관) (검색일: 2017. 11. 20).

8) 이는 우리에게 레퍼곡선으로 알려져 있는 데, 레퍼곡선과 관련해서는 재정학 교과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9) Auerbach, A., and J. Slemrod(1997),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ax reform act 1986,”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책들은 결국 최상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였으며, 전 세계적인 계층 격차를 심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캘리포니아 대학의 Saez 교수(Piketty and Saez, 2006)¹¹⁾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고소득 상위 10%의 가계가 미국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쟁 이전까지는 45%로 매우 높았지만, 전쟁과 대공황으로 인해 30%대 중반까지 급감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상위 소득자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특히, 상위 1% 가계로의 소득 집중 역시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당시의 소득 격차 확대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IT 혁신 및 국제화의 진전이 미숙련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경제격차를 확대시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자체가 경제격차 확대의 원인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기술 혁신·국제화 등으로 인해 경제격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로 인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은 분명하다. 이미 1980년대 말에는 경제격차 확대가 큰 문제가 되면서 정치 평론가인 Philips가 경제격차 확대를 비판한 베스트셀러를 출판하였다(Philips, 1990)¹²⁾. 1990년대 초, 조지 부시 정권 하의 미국 경제는 불황과 거대한 재정적자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조지 부시 대통령은 걸프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1992년 등장한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은 앨런 그린스핀 FRB 의장과 경제 고문의 조언에 따라, 거액의 재정 적자와 경제 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비 삭감과 고액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증세를 통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부시 정권 하에서 31%였던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39.6%로 끌어올리고, 법인세율 역시 1% 인상하였다. 또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간층에 대한 감세를 공약하였지만, 재정적자의 심각성으로 인해 공약 위반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중간층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였다¹³⁾.

이에 대해 “공급측 경제학” 측에서는 최고 세율 인상은 조세 왜곡을 가져와 경제 후생에 큰 손실을 야기한다고 비판(Feldstein, 1995)¹⁴⁾ 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클린턴 정권 하의 미국 경제는 ‘황금의

10) Stiglitz, J. E.(2006), 『Making Globalization Work』, pp.133-159, W.W. Norton & Company.

11) Piketty, T. and E. Saez(2006), “The Evolution of Top Income: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6, No.2.

12) Phillips, K.(1990), 『Politics of Rich and Poor』, Random House.

13) Woodward, B.(1994), The Agenda: Inside the Clinton White House, Simon & Schuster.

14) Feldstein, M.(1995), “The effects of marginal tax rates on taxable income: A panel study of the 1986 tax reform ac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3, No. 3.

90년대'라고 불리는 고성장기를 맞이하였다. 증세와 세출 삭감으로 재정 적자가 축소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IT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린스핀 FRB 의장 역시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한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한 결과, 1990년대 말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재정 흑자를 실현하였다.

공화당 정권과 달리 클린턴 민주당 정권에서는 낙수효과 이론을 부정하고, 소득재분배를 중시하였다. 다만, 전통적인 “큰 정부” 정책을 지양하고, 영국 블레어 정권의 “제 3의 길”에 가까운 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은 인정하고, 규제완화는 계속하였으며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교육 강화나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충을 중시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Card & Kruger(1994)의 “최저 임금을 인상해도 고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실증연구¹⁵⁾ 를 근거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였다.

2000년 등장한 조지 부시 공화당 정권의 재정정책은 다시 공급측 경제학으로 진행되었다. 9.11 테러 이후의 불황 대책으로서,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 최고 소득세율은 35%로 인하되었으며,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크루그만은 재정정책이 다시 부두경제학(Voodoo Economics)¹⁶⁾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비판하였다(Krugman, 2000)¹⁷⁾.

그러나 감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시 감세의 상당수는 2011년에 종료되었다. 재원 없는 감세, 이라크 전쟁에 의한 세출 확대로 인해 클린턴 정권의 재정 흑자는 사라졌고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가 발생되었다.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경제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그 후 미국 금융위기를 진원으로 하는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부시 정권은 물러났다.

오바마 정권은 부시정권의 감세 정책을 “실패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부정하면서 “새로운 재정 책임의 시대”로 경기회복 후 증세를 포함한 재정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낙수효과 이론을 부정하고 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중시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영리한 정부”인지 여부라고 설명하였다. 오바마 정권의 세계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2010년 2월 ‘예산교서’에 잘 나타나 있다.¹⁸⁾ 당시에 진행된 세계개혁의 전체 구조는 저·중간소득자에 대한 감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이뤄져 있다. 예를 들면, 33% 세율이 적용되던 고소득자에게는 36%로,

15) Card, D. and A. Krueger(1994), “Minimum wage,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4.

16) 부두 경제학이란, 아이티에서 주로 믿는 주술적 종교인 부두교에서 이름을 따 온 것으로, 상당한 냉소와 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7) Krugman, P.(2000), “Reckonings; The Two Larrys”,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00/11/19/opinion/reckonings-the-two-larrys.html> (검색일: 2017. 11. 21).

18) The 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TPC).

35% 세율이 적용되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39.6%까지 세율을 인상하였다. 각종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고액 소득자의 이익을 제한하면서, 자본이득과세·배당 과세를 기존의 20%로 환원시켰다.¹⁹⁾

오바마 정권의 세계개혁안은 공화당 측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의 Boskin 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2009.3.6.)²⁰⁾에 “최고 세율의 인상으로 인센티브가 없어져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라고 말하였으며, 배출권 거래의 부담이 전가되어 저·중간 소득자의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비판하였다. 이에, 오바마 정권은 과거 증세를 시행하면서 고성장을 이루었던 클린턴 행정부를 예로 들면서 “고율(최고 세율 : 39.6%)의 세율이 반드시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하였다. 다만, 오바마 정권의 세계개혁안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화 시대에 세율을 지나치게 높이면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전²¹⁾ 한다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권은 경제회복 조짐을 보인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권을 인계하였다. 2017년 진행 중인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공화당 정권의 특성, 기업을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권에서도 또 다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표 1 〉 미국의 시대별 재정정책

구분	주요 정책
1960~70년대	케인지안정책(케네디 감세 등)
1980년대	공급측 경제학에 기반한 정책과 낙수효과 이론의 실패
1990년대	클린턴 경제의 성공(황금의 90년대 실현)
2000년대	부시정권의 낙수효과 이론의 실패
2009년	낙수효과 이론의 부정과 오바마노믹스의 등장

미국에서 경제격차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가 성장하면 저소득자에게도 자동적으로 혜택이 있다”는 낙수효과 이론이며, 해당 정책은 규제완화나 고소득자에의 감세 등에 의한 경제성장의 촉진으로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에는 냉정하게 접근한다. 미국의 레이건 정권과 조지 부시 정권이 대표적이다.

둘째, 클린턴 정권이나 오바마 정권이 주장하는 “제3의 길”에 가까운 생각, 즉, 시장 경제의 중요

19) Ibid.

20) Boskin, M.(2009), “Obama’s radicalism is killing the Dow,” Wall Street Journal, 2009. 3. 6

21) Hines, Jr. J. R. and L. H. Summers(2009), “How Globalization Affects Tax Design”, NBER working paper.

성을 인식하여 국제화나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규제 완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확대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낙수효과 이론과 달리,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실시하지 않으면 경제 격차를 축소 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²²⁾

나. 일본

일본에서는 낙수효과 이론을 균점이론(均霑理論)²³⁾ 이라고도 하며, 아베 정권(2012~현재)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낙수효과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0년대의 경제정책은 공급측 경제정책과 낙수효과 이론을 중심으로 한다. 고이즈미(小泉) 정권(2001~2006)에서는 레이건 제1기 세계개혁과 마찬가지로 공급측 경제학에 기반한 정책이 강화되었다. 이들은 인센티브를 중시하고 감세에 의한 경제성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세금 인하는 소득 증대를 의미하므로 노동시간 또는 노동인력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내각부(2001)²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과세소득 탄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엄밀하게 분석한 타지카·야시오(田近·八塩, 2005)²⁵⁾의 연구에서도 세율 변화에 의한 유인구조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세의 인센티브 효과로 고성장을 실현하기에는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본에서 낙수효과에 대한 시각을 보면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낙수효과에 대한 논쟁 자체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므로 시대별 전개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낙수효과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낙수효과에 대한 긍정적 시각

2013년 발표한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1. 대담한 금융정책, 2. 신속한 재정정책, 3. 일본재흥전

22) 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의견으로 시장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즉, 전통적인 시장 경제를 성장 격차의 원인으로 인식하면서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과세, 상속세의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Rajan, R. and L. Zingales(2003),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Crown Business, New York』).

23) 下村恭民·辻一人·稲田十一·深川由起子(2009), 『国際協力 新版—その新しい潮流』, p. 206, 有斐閣.

24) 内閣府政策統括官(2001), “1990年代における所得税制改正の効果について”, 『政策効果分析レポート』, No. 9.

25) 田近栄治·八塩裕之(2005), “税制制と事業形態選択—日本のケース”, 『財政研究』, 第1巻, pp. 177-194.

락)과 국가전략특구는 낙수효과를 활용한 대표적 정책이다. “3개의 화살”은 금융 및 재정확장, 규제 완화를 수단으로 하여 수요 확장 및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일본재흥전략은 기업의 공급 측면을 활성화하여 기업 수익을 개선시키고, 이것이 고용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⁶⁾²⁷⁾ 이와 함께 “대담한 규제·제도 개혁의 돌파구”로서 “암반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집적효과가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²⁸⁾²⁹⁾ 이는 도시에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방으로 영향력이 파급되어 일본 경제 전체를 성장시킨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활용하려는 시책이다.

이에 대해, 이이다(飯田, 2014)는 경제 상승 국면에서 가장 먼저 자산 가치가 반응³⁰⁾ 하고 그 움직임이 파급되면서 경기가 호전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옹호하였다. 하마다(浜田, 2014)는 아베노믹스의 결과로 낙수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³¹⁾ 수출기업의 실적 호조 →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이뤄지면서 자산 투자자들이 1차적인 수혜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술력이 없는 단순노동자의 시간 외 임금 인상,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성과 확산 과정이 진행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서민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낙수효과에 기반한 아베노믹스가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지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낙수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2000년대 이후 많아지고 있다. 쿠니에다(國枝, 2009)³²⁾는 재정 책임과 소득재분배를 중시한 오바마 정권의 세계개혁에 비해 일본의 세계개혁은 상당히 비효율적이

26) 上村未緒(2013), “日本再興戦略の特徴と今後の課題”, 『みずほインサイト政策』, みずほ総合研究所.

27) 野田彰彦(2013), “4年ぶりに復活した骨太方針～求められる財政健全化に向けた具体策と仕組みづくり～”, 『みずほインサイト政策』, みずほ総合研究所.

28) 上村未緒(2014), “実行段階に入った国家戦略特区”, 『みずほインサイト政策』, みずほ総合研究所.

29)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김은지·서영경(2013), “아베노믹스 국가전략특구 구상의 주요내용과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30) 飯田泰之(2014), “景気回復を実感する年に一カギ握る成長戦略の成否”, 『第三文明』, 2014年 2月号, (<http://www.d3b.jp/politics/3219>) (검색일: 2017.11.21.).

31) 長谷川幸洋가 2014년 9월 12일에 浜田宏一과 한 인터뷰 내용에서 재인용. 자세한 내용은 長谷川幸洋(2014.9.12.), “安倍首相のブレーン 浜田宏一内閣官房参与に聞く『消費増税と法人税引き下げの行方』”, 現代ビジネス를 참조하기 바란다.

32) 國枝繁樹(2009), “オバマ政権の税制改革と日本への含意”, 『租税研究』, Vol. 718, pp. 23-38.

라고 지적하고 있다.

쿠니에다(国枝, 2014)³³⁾는 2000년대 전반 오부치 정권의 재정정책을 공급측 경제학(낙수효과)에 기반한 레이건 정권, 부시행정부의 감세 정책, 독자적인 “폰지 재정정책”이 혼재되면서 재정건전성 개선 속도가 더욱 느려졌다고 설명한다. “폰지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고액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차환을 반복하면서 국채의 대부분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선진국에서 적용하기 힘든 주장이다(Abel et.al., 1989)³⁴⁾.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는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아소(麻生) 정권은 2009년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기 세계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아소(麻生) 정권에서 제시한 중기 세계개혁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보면,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과 더불어 증세를 포함한 세계개혁 정책을 발표하는 등 오바마정권의 세계개혁 방향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였는데, 최고세율 조정 등에 의해 고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세액공제 등 중·저 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점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쿠니에다(国枝, 2007³⁵⁾, 2014)).

오오타케(大竹, 2010)³⁶⁾는 중산층이 많을수록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중산층의 소비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고 설명하였으며, 나카노(中野, 2012)³⁷⁾ 역시 일부 부유층이 소비하는 것보다 다수의 중산계층이 소비하는 편이 소비 규모가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다나카(田中, 2015)은 설비투자, 경기회복 국면에서의 기업 이익 및 임금 등 다양한 통계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낙수효과의 문제점을 진단해 본 결과, 대기업 이익 → 임금 상승 → 고용증가 → 가계 소비 증대 →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 선순환 과정은 1990년대 말 이후,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결론³⁸⁾을 내렸다. 이이다(飯田, 2015)³⁹⁾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배 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33) 国枝繁樹(2014), “わが国の財政問題と金融システムへの影響”, 金融調査研究会報告書.

34) Abel, A., G. Mankiw, L. Summers, and R. Zeckhauser(1989), “Assessing dynamic efficiency: Theory and evidence,” Review of Economic Studies.

35) 国枝繁樹(2007), “最適所得税理論と日本の所得税制”, 『租税研究』, pp. 69-82.

36) 大竹文雄(2010), “競争と公平感-市場経済の本当のメリット”, 『中公新書』, p. 162, 中央公論新社.

37) 中野剛志(2012), “レジーム・チェンジ恐慌を突破する逆転の発想”, 『NHK出版新書』, p. 70, NHK出版.

38) 田中信孝(2015), “日本経済の動向と発現が困難な「経済の好循環」”, 『自治総研通巻』, No. 441, pp. 32-50.

39) 飯田泰之・田中秀臣・麻木久仁子(2015), 「30万人都市」が日本を救う! (中国版「ブラックマンデー」と日本経済), p. 63, 藤原書店.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일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대도시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경기 회복이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14년 5월, 민간 전문가 조직인 “일본창성회의”에서 인구감소문제 검토 분과회(단장 :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전 총무상)가 발표한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에서 30년 후에는 현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 자치체가 인구 감소에 의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소멸가능 도시”에 지명된 자치체를 중심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정부에서도 인구감소대책과 지역활성화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⁴⁰⁾

“마스다 보고서”와 2015년 4월 통일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지방 창생이 중점 정책과제가 되었다. 지역활성화 대책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커다란 성과가 나타난 적이 없다. 즉, 도심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원했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15년 1월 28일 아베 수상은 ‘아베정권이 목표하는 것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경제의 선순환 실현이며 지방 경제의 상승’이다 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으며, 이후 아베정권의 경제정책 및 아베를 지지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낙수효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⁴¹⁾

후지타(藤田, 2015)⁴²⁾은 아베정권에서 수행한 지방 창생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베 정부는 2014년 지방 창생(지방 활성화)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영세 중소기업, 지방,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못하였다.

타나카(田中, 2016)⁴³⁾은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을 통한 낙수효과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은 살포식 방만재정이며, 이전부터 내려오는 부채(負債)도 있지만 적자 국채의 누적은 점차 커지면서 1,000조 엔을 넘어섰다고 비판한다. 소비세 증세와 법인세 감세라는 정책 방향의 설정 배경에는 낙수효과가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으나 실제 이러한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한국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 개념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던 시기는 MB 정부 시절이다. MB 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다양한 감세정책(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규제완

40) 上村未緒(2015.), “動き始めた地方創生特区”, 『みずほインサイト政策』, みずほ総合研究所.

41) 톰슨 로이터(2015.1.28.), “トリクルダウンでなく、経済の好循環目指す = 安倍首相”, <https://jp.reuters.com/article/abe-economy-idJPKBN0L10CT20150128> (검색일: 2017. 11. 16.).

42) 藤田安一(2015), “安部「成長戦略」による「地方創生」の特徴と問題点”, 『地域学論書』, 第11巻, 第3号.

43) 田中史郎(2016), “戦後70年日本経済の軌跡 -日本経済の歩みとこれから-”, 『人文社会科学論書』, No. 25, pp. 47-61.

화 등이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이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최고한도를 25%에서 22%로 낮춘 것)는 낙수효과에 기반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ECD(2015)에서는 한국경제에서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도 성장기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벌 기업집단이 주도하는 수출은 내수와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를 예전처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⁴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3. 분수효과

낙수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할 경우, 경제성장과 분배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 위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이다.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생산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지칭한다. 이러한 분수효과는 소득의 크기에 따른 한계 소비성향이 상이⁴⁵⁾하다는 케인즈 경제학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구심점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증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즉,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유발되는 ‘소득증대 → 소비증대 → 생산증대 → 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는 부유층의 혜택으로 귀결⁴⁶⁾된다는 것이 분수효과 개념의 핵심이다.

결국 분수효과는 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과 복지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수효과 개념은 분배를 우선시 하는 미국 민주당에서 경제정책 입안 및 개선 시 주요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1993년 1월 클린턴 행정부는 낙수효과 이론은 허구라면서 분수효과 개념을 강조한 바 있다.

44) OECD(2015), 『Better Policy Korea』, pp. 1-5. OECD.

45)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준다고 할지라도 고소득층은 이미 높은 소비 수준을 영위하고 있어 소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은 늘어난 소득을 거의 다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여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6) 이한영(2016), 『너 이런 경제법칙 알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경제학 키워드 100』, 21세기 북스, pp. 146~150.

OECD(2014)⁴⁷⁾ 역시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소득 격차의 추세적 확대는 경제성장을 대폭 억제시켰다고 설명한다. 소득 격차의 전반적인 확대는 상위 1%의 초부유층에 의해 견인되지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되는 저소득층이다. 성장격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빈곤층 뿐 만 아니라, 실제로는 하위 40% 소득층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빈곤한 사람들은 교육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세정책이나 소득분배정책을 활용하여 빈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바로 분수효과에 기반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IMF(2015)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IMF는 소속 경제학자 5명이 150여 개국의 계층별 소득과 국가 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낙수효과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IMF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게 되면 이후 5년 동안 국가 성장률이 연평균 0.08% 감소하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할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국가 성장률이 연평균 0.38% 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이는 하위 계층의 소득 증대가 중산층 유지 및 국가성장률 제고로 귀결된다는 의미로,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의 실증적 효과가 가시화된 셈이다. 경제 양극화 심화로 ‘분수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III. 낙수효과에 대한 접근방법 및 기존연구

1. 경제현상에 대한 주요 접근방법

경제현상 분석방법은 거시적 분석, 산업별 분석, 기업별 분석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macro) 분석은 경제 시스템 차원에서 생산 또는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이를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집계변수 및 총량변수로서 경제 전체 및 산업 전반에 관한 일반균형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별(meso) 분석은 부문들 사이의 전후방 연계, 산업 내, 산업간 수직적·수평적 연계 및 전후방 연관효과와 관련한 부분균형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구조분석에서는 산

47) OECD(2014), 『特集:格差と成長』, p. 4, OECD.

48) Era Dabla-Norris, Kalpana Kochhar, Nujin Suphaphiphat, Frantisek Ricka, Evridiki Tsounta(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pp. 1-39, IMF.

업 환경 분석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가장 적합한 분석 수단은 산업연관분석이다. 기업별(micro) 분석은 주로 개인이나 기업, 기관 등 개별 주체를 둘러싼 환경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 단위의 미시적 통계를 활용하면 다양한 실증분석이 가능하여 널리 활용된다.

Capron(1992)은 상술한 3단계 분석방법을 활용, 매트릭스 형태로 구조화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와 실증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 Capron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국가경제, 산업, 기업의 관점으로 나누어 매트릭스 형태로 분석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낙수효과 분석 기법을 구조화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표 2 〉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본 낙수효과 분석방법

정책 목표	정부의 지원정책은 낙수효과(또는 분수효과)를 얼마나 확대시킬 수 있는가		
경제 이론	micro economics	meso economics	macro economics
국가 경제	정책이 기업의 행태를 개선하는 정도 (시너지 효과)	정책이 경제구조 변화(산업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정책이 경제성장을 개선시키는 정도
(분석 방법)	(전략적 파트너십 분석)	(경제구조분석 또는 구조방정식 모형)	(경제성장에 관한 거시모형)
산 업	거래관계에서 기업의 전략적 대응 패턴 등 네트워킹 활동에 대한 정책효과	정책이 낙수효과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정책이 산업경쟁력을 개선시키는 정도
(분석 방법)	(기업의 경영전략 분석)	산업연관분석모델	수출 분석 모델
기 업	정책이 원청업체/ 상위 협력업체 등의 개별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낙수효과 확대정책이 산업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낙수효과 확대정책이 개별기업의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분석 방법)	(민간기업 활동조사/ 기업통계분석)	산업집중도 분석모델 (허쉬만-허핀달 지수, 지니 계수)	생산성 분석
산업조직	행위(기업행태)	구조	성과

자료 : Capron, H. (1992), "A State of the Art of Quantitative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R&D Programmes", in M.T. Khalil and B. Bayraktar (eds.), Management of Technology III,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Press, pp.1195-1204, Georgia 을 낙수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표 2]의 우상향()에 강조된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 핵심 요소이다. 먼저, 거시

적 분석(거시경제모형)의 경우, 경제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거시경제의 성장에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분석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대안으로 경기종합지수를 활용하여 대기업 군과 중소기업 군 사이의 연관관계를 인과적으로 분석하여 낙수효과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산업별 분석(대-중소기업 산업연관분석)은 대기업-중소기업간 매출액, 고용,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하지만 산업연관분석의 경우, 개별 기업의 행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의 크기가 항상 '양(+)'의 값으로 측정되는 점, 산업연관표가 5년 단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계수 값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한계로 지적된다.

기업별 분석의 대상은 대기업-1차 협력업체, 1차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3차 협력업체'의 기업 간 거래관계가 된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업 DB를 활용한 통계분석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간 설문조사 기법이 사용된다. 분석방법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설문조사의 경우, 정성적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로 대기업-1차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간 거래관계를 분석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기업통계 DB 분석의 경우, 객관적인 통계 DB를 활용하여 재무구조 변화에 대한 효율적 분석이 가능하지만, 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업데이트가 매년 이뤄지지 않는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모든 기업이 거래관계를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분석 시에는 이론적 분석 범위와 정책적 목표 사이의 불일치에 기인하여 많은 애로가 발생한다. 낙수효과의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 경제 전반에 걸친 분배의 개선이지만 이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 다양한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하며, 거시경제 전반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미시적 현상 사이의 불일치 발생도 관련 정보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단원에서는 거시적 분석, 산업별 분석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기업별 분석에 대한 실증분석은 별도의 단원에서 분석한다.

2. 거시적 분석

낙수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총량변수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구분 등 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의 성장이 중·저 소득층, 중소기업으로 얼마나 파급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시 모형은 경제 구조 전체를 분석하거나 성장을 위한 투자 분석 등에 주로 활용되는 총량 모형이다. 즉, 거시모형의 분석 기법상의 특성으로 인해 낙수효과를 거시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집계변수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대-중소기업을 분리시키기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경기종합지수를 활용하여 낙수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홍성철(2016)⁴⁹⁾이 대표적이다. 홍성철(2016)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대기업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3~2009년 사이에는 대-중소기업간 성장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2009~2016년 사이에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철(2016)의 연구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기반 하지 않고, 국가 전반의 거시적 관점에서 대-중소기업간 낙수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⁵⁰⁾

〈 표 3 〉 Granger 인과관계를 활용한 대기업 낙수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2003년~2009년			2010년~2016년		
후행시간	대→중소	중소→대	후행시간	대→중소	중소→대
1	4.07 *	3.97 *	1	0.28	3.26
2	6.28 **	4.22 *	2	0.02	4.31 *
3	8.68 **	6.88 **	3	0.46	2.74
4	4.86 **	5.33 **	4	1.33	3.48 **
5	2.96 *	2.35	5	1.59	2.67 *
6	3.85 **	4.61 **	6	0.82	1.48
7	2.56 *	3.11 *	7	0.93	1.36
8	2.42 *	2.55 *	8	1.38	0.81
9	2.98 **	2.81 *	9	1.53	0.84
10	3.99 **	3.51 **	10	1.74	0.86
11	3.62 **	2.94 **	11	1.48	0.63
12	3.36 **	2.72 *	12	1.65	0.78

주 : Granger 인과관계 검정 : 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원인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 방법

(대→중소) : 대기업 경기가 중소기업 경기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

(후행 시간) : 인과관계 추정 시 사용된 각각의 시차(1개월)

(값의 의미) : 귀무가설에 대한 F-value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

*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 **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자료 : 홍성철(2016)

49) 홍성철(2016),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50) 홍성철(2016)의 연구는 그동안 축적된 중소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특화된 경기지수 및 경영환경지수를 개발하여 중소기업 환경변화가 중소기업 경기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표 선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보다 특화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지수 작성에 있어서 이전 연구에 비해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홍성철(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산업별 분석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산업연관분석이다. 부문들 사이의 전후방 연계를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⁵¹⁾

첫째, 대부분의 정책은 특정 기업이 아닌 유리한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특정 기업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가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산업단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 부문은 일방적 영향보다는 상호간 피드백을 통해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로서 특정 부문에 집중하여 분석이 진행될 경우, 정책효과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부문별 결과를 의미 있게 집계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직접적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외에도 간접적으로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는데,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산업연관분석을 보다 엄밀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문들 사이의 관계, 이용된 자료, 부문들을 묶는 기법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 통계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낙수효과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기업의 재무구조, 수익성, 소유구조 변화과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 낙수효과의 성과 여부를 검증하고자 했던 김근수(2014)⁵²⁾도 낙수효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근수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2000년대 이후 대기업의 고용,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감소추세로 반전하면서 선도부문의 성장 과실이 후발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대기업의 성장과 수출증대가 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업 간 거래 자료를 이용한 연결망 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성장을 거쳐 국민경제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했던 홍장표·장지상(2015)⁵³⁾ 역시, 낙수효과의 약화를 주장했다.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면, 대기업의 해외투자자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확대가 국내 생산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51) Peneder, M. (WIFO), “Creating a coherent design for cluster analysis and related policies—Austrian “TIP” experience”, OECD, 1997. Nov. ; Alex Hoen, “Three variation on identifying clusters”, OECD(www.oecd.org/sti/inno/2099308.pdf).

52) 김근수(2012), “재벌의 실태와 경제적 파급효과”, 『經濟發展研究』, 제18권 제2호, pp. 37-64.

53) 홍장표·장지상(2015), “대기업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생산·고용유발효과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제21권 제2호, pp. 33-62.

것이다.

그러나 산업단위의 낙수효과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는 산업연구원에서 작업 중인 “대중소기업 간 산업연관표”이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간 파급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는 작업도 가능해졌다. 즉, 대기업의 경제활동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파급효과를 연속적인 시계열로 확장할 경우 파급효과의 크기가 변화하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집계 변수를 활용하므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장점까지 보유하고 있다.⁵⁴⁾ [표 4]가 『대·중소기업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유발효과를 분석한 사례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부문 대기업의 생산이 한 단위 증가했을 경우, 유발하는 생산효과는 물론 대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나, 2010년 71.3%에서 2013년 64.8%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오히려 동 기간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28.7%에서 35.2%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표 4 〉 자동차 부문 대기업의 생산유발효과

구분	2010		2012		2013	
	생산유발	비중	생산유발	비중	생산유발	비중
대기업	177.9	(71.3)	163.4	(66.1)	162.0	(64.8)
제조업	33.6	(13.5)	32.2	(13.0)	27.6	(11.0)
자동차	132.8	(53.2)	119.6	(48.4)	123.5	(49.4)
서비스	11.5	(4.6)	11.5	(4.7)	10.9	(4.4)
중소기업	71.7	(28.7)	83.9	(33.9)	88.0	(35.2)
제조업	41.0	(16.4)	42.9	(17.3)	46.4	(18.5)
자동차	11.4	(4.6)	21.5	(8.7)	22.6	(9.1)
서비스	19.3	(7.7)	19.5	(7.9)	19.0	(7.6)
전체	249.6	(100.0)	247.3	(100.0)	250.0	(100.0)

자료 : 이진면·이용호·김재진(2016), 『2013년도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과 분석』, 산업연구원.

54) 대·중소기업간 산업연관표의 작성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산업연구원에서 발간된 이진면·이용호·김재진(2016), 『2013년도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과 분석』을 참조 바란다.

4. 기업별 분석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연결·분석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실증연구들 중에는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는(=낙수효과가 존재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먼저, 이병기(2012)⁵⁵⁾는 조립 대기업과 부품생산 중소기업 간에 수직적 거래관계가 발생하는 대표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위탁 대기업의 이익률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협력기업들의 이윤율도 동반상승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들의 매출 성장 및 투자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력 중소기업들의 업력이 짧을수록, 또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성장은 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이병기(2012)의 연구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성과를 직접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박상용·신현한·홍은주(2013)⁵⁶⁾는 삼성전자와 협력사, 계열사의 3자 관계를 경영성과 측정변수, 재무성과 변수로 분석하여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강할수록 중소기업의 성장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협력사의 성장성 지표(매출액 성장률)는 삼성전자보다도 높게 관찰되었으며, 수익성 지표 역시 삼성전자 계열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단, 삼성전자 협력사와 동종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측정되고 있는데, 동종 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과지표가 협력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투자자본수익률은 동종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보다 삼성 협력업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중 산업 선두기업인 계열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성과를 분석했던 신현한·김소연(2014)⁵⁷⁾ 역시, 낙수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납품단가 할인으로 인해, 협력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비협력업체의 매출총이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타 비용 절감으로 손실을 만회함으로써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자산회전율 등은 협력업체가 비협력업체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대기업 성과는 협력업체 성과 창출에 (+)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조동근·빈기범(2014)⁵⁸⁾은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을 표본기업으로 분석하여 대기업 성과와 중소

55) 이병기(2012),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 분석 - 자동차·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pp. 1-62, 한국경제연구원.

56) 박상용·신현한·홍은주(2013), “협력사의 성과에 관한 연구 : 삼성전자 협력사를 중심으로”, 『경영연구』, 28(3), pp. 281-309, 한국산업경영학회.

57) 신현한·김소연(2014), “대기업 협력업체의 성과분석 - 4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 pp. 1-93, 한국경제연구원.

58) 조동근·빈기범(2014), “처리량 반응 분석에 의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낙수효과의 존재에 대한 제한적 증거”, 『국제경제연구』, 20(3), pp. 25-35, 한국국제경제학회.

기업 성과 사이에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입증했다. 일반화 성향점수 및 처리량 반응 분석을 통해 협력업체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을 기준으로, 납품 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결과,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많이 할수록(대기업과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매출, 총자산, 고용 등에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었다.

끝으로, 이종욱·오승현(2014)⁵⁹⁾은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분석을 통해, 대기업 성과 개선의 낙수효과가 직접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발생한다는 결론을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패널 회귀 분석, 다중패널 회귀분석 모두에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과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연도별 영업이익 증가분과 대기업 영업이익의 연도별 증가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반면, 부정적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대기업 투자가 중소기업 투자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를 거시모형과 미시적 기업투자함수를 이용하여 검증한 박승록·최두열(2011)⁶⁰⁾에 따르면, 대기업 투자가 중소기업이나 기타 거시경제 변수에 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투자 함수 분석에서도 대기업 투자의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낙수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상규(2011)⁶¹⁾ 또한 낙수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대기업과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 비율과 수익성 간의 관계를 두 가지 가설⁶²⁾을 통해 검증한 결과,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비율과 매출 총 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모두 음(-)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59) 이종욱·오승현(2014), “대기업 성과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네트워크론 자료를 이용한 낙수효과 실증분석”, 『금융지식연구』, pp. 141-162.

60) 박승록·최두열(2011), “대기업 투자의 적하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29(4), pp. 207-235.

61) 심상규(2011),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비율과 수익성 간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제33권 4호, pp. 159-176.

62) (가설 ①)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다량의 제품 판매를 통한 가격 할인이 발생하여 다른 판매처에 비해 매출 마진이 낮다면 대기업 판매비율과 매출총이익률은 음(-)의 관계를 가질 것. (가설 ②) : 대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지원 및 판매처 확보에 따른 판매비절감액이 반영되어 제품 가격이 결정된다면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비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역시 음(-)의 관계를 가질 것.

IV. 낙수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 기업별 통계를 활용하여

1. 분석 개요 및 기초통계 분석

가. 분석 개요

기업 간 거래관계에 기초한 기업별 분석방법은 낙수효과 측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거래단계별로 보면, 원청업체의 매출액 증가 시, 1차 협력업체 뿐 아니라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의 매출액도 증가한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수가 매년 동일하지 않고, 거래 품목도 상이하기 때문에 거래단계에 따른 증가 폭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원청업체도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분석을 통해 낙수효과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한편, 통계분석에 필요한 지표와 보완사항을 검토한다.

기업별 분석은 거시적·산업별 분석과 달리, 기업 간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협력단계별(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등) 낙수효과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시적 분석에 활용가능한 자료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제공되는 통계자료이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NICE신용평가정보와 한국기업데이터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기업데이터의 통계 DB를 활용한다. 한국기업데이터의 통계 DB에는 구매처와 판매처 정보 및 기업명 정보가 함께 제공되므로, 본 과제의 연구목적에 적합하며, 거래관계 분석에는 원청업체의 구매정보와 협력업체의 판매정보가 사용된다.

〈 표 5 〉 한국기업데이터 DB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정보

유형	지표명
기업 개요	KED고유번호(사업자번호), 기업체명, 기업규모, 기업형태, 소재지, 정보기준일자, 기업설립년도
고용	KED고유번호, 정보기준일자, 상시 근로자 수 합계
주요 거래처	KED 고유번호, 정보기준일자, 거래형태(구매/판매),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비율, 현금결제비율, 외상결제비율
재무통계	매출액, 부채 비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주 : 중소기업연구원이 2017년에 구입한 한국기업데이터 DB의 기초 통계량 분석을 토대로 작성.

기업 간 거래는 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특정산업⁶³⁾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A산업에 속한 대기업(원청업체)을 대상으로 하여, A산업 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를 연결망으로 연결한다. 단, 이 경우 1차, 2차, 3차 협력업체는 반드시 A산업에 속할 필요가 없으며, 전 산업에 골고루 분포할 수 있으나, 정책당국이 관심을 가지는 산업이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므로 전 산업의 범위는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분석 대상을 특정 산업으로 국한하는 이유는 ① 본 연구의 분석목적이 미시적 기법을 활용한 낙수효과의 크기 외에도 관련 통계의 이용가능성과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있고, ② 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하면 원청업체-납품업체간 통계를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는 있으나, 원청업체를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통계량이 지나치게 방대해지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분석대상을 단순화하여 거래관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특정 산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

- 주요 분석 내용 : 협력단계별 거래기업의 평균적 특성
- 분석기간 : 2008~2015년
 - 관측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면서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 (설정근거 ①) 한국기업데이터의 통계에는 2000년 이후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2000년대 초반의 통계의 경우 관측치가 부족
 - (설정근거 ②) 2008년 금융위기는 국내 기업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기업 간 거래 관계 패턴에 영향을 변화를 초래
 - 분석기간은 연(年) 단위로 통일
- 분석기준
 - 통상적인 기업 통계 분석에서 적용되는 연도별, KED 고유번호를 설정
- 분석 범위
 - A 산업에 속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1차 협력업체 - 2차 협력업체 - 3차 협력업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
 - 낙수효과의 존재유무에 따라 특정산업을 이산화하는 것은 연구목적에 어긋나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속한 산업명을 기재하지 않음
 - 매출액 정보가 없는 기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며, 협력단계 분석에서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은 삭제
 - 납품 기업 규모는 3개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설정
- 분석 방법 및 분석 지표
 - 분석 방법 : 연결망 분석 및 패널 모형(고정효과 모형)
 - 분석 지표 : 고용(상시 종사자 수), 매출액, 자산, 부채, 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 분석에 활용하는 통계 패키지
 - 연결망 분석 및 기초 통계의 가공에는 SAS 9.4를 활용하였고, 패널 분석에는 STATA 13을 사용

63) 낙수효과가 화두가 되면서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산업명을 무기명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분석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연결망 분석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따르게 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납품기업이 특정 기업에 국한하여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품목에 따라, 다양한 협력단계에 분포한 複數의 기업과 거래하게 되므로 상당수의 기업은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에 중복되어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통계분석에서는 중복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통계표를 작성하였으며, 실증분석에서는 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해 거래 비중이 큰 부분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게다가 특정 산업 내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1차 협력업체들이 거래관계에 위치한 모든 기업을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의 거래관계를 파악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나. 기초통계량 분석

정보의 입력 시점은 연도 기준으로 통일하였고, 재무정보는 연도별 · KED고유번호(필요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연결하였다. 통계의 결합 시에는 특정기업의 특정연도별 거래관계 분석보다는 분석기간 동안 거래가 있었을 경우, 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납품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했다.

〈 표 6 〉 협력단계별 업체 수(분석기간 동안 거래가 있었을 경우)

기업규모	1차 협력	2차 협력	3차 협력	합계
대기업	16	8	14	38
중견기업	54	35	30	119
중소기업	329	688	1,688	2,705
합계	399	731	1,732	2,862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의 통계를 가공하여 작성

한국기업정보의 거래관계DB를 활용하여 이미 식별된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를 식별하고, 1차 협력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2차 협력업체로 식별, 최종적으로 2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를 3차 협력업체로 식별하였다.

결합한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특정연도에 한 개 이상의 기업과 거래하면서, 납품하는 품목에 따라 협력단계별 구조가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어떤 기업은 1차, 2차, 3차 협력업체에 동시에 포함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201개

이며, 1차-2차-3차 협력단계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284개에 달했다.

〈 표 7 〉 협력단계별 업체 수(분석기간 동안 거래가 있었을 경우) - 중복거래 고려

기업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1차	7	23	201	231
2차	2	4	330	336
3차	7	6	595	608
1차-2차	12	32	197	241
1차-3차	1	3	24	28
2차-3차	7	15	1,074	1,096
1차-2차-3차	2	36	284	322
합계	38	119	2,705	2,862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의 통계를 가공하여 작성하였다.

원청업체-1차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3차 협력업체의 기초 통계량 분석 결과, 우선 원청업체에 속한 기업들은 고용과 매출액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5년 기준, 원청업체들의 매출액은 6.3조 원이었으며, 고용은 6,746명에 이르고 있었다.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역시 평균 3.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교육훈련비는 낮게 나타났다.

〈 표 8 〉 기업 재무정보(원청업체)

(단위 : 십억 원,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체수	33	34	30	24	19	19	19	18
매출액	2,116	2,108	2,854	4,185	5,410	5,414	5,669	6,348
고용	3,219	3,144	3,542	4,450	5,789	6,046	6,279	6,746
자산	1,914	2,097	2,960	4,155	5,605	6,044	6,605	7,625
부채	890	913	1,210	1,627	1,954	1,874	1,993	2,348
자본	1,024	1,184	1,749	2,528	3,652	4,170	4,612	5,277
이자비용	21	24	27	24	23	15	14	15
영업이익	114	151	256	388	476	435	412	522
당기순이익	86	184	229	364	542	556	535	569
교육훈련비*	483	628	748	1,297	1,896	1,969	2,032	2,512
연구개발비	35	32	63	98	125	136	152	197

주 : 교육훈련비만 단위가 백만 원임.

2015년 기준, 1차 협력업체에 속한 기업들의 매출액은 2,639억 원, 고용은 280명이며,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자비용/영업이익)은 15.1%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연구개발비/매출액)은 1.8%이며, 교육훈련비 역시 낮은 수준이다.

〈 표 9 〉 기업 재무정보(1차 협력업체)

(단위 : 백만 원,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체수	352	342	347	331	331	331	324	312
매출액	148,055	143,360	182,471	241,742	230,708	228,003	252,502	263,934
고용	257	270	256	267	266	264	269	280
자산	124,536	153,376	181,800	219,496	232,688	250,204	270,585	297,333
부채	67,485	78,928	96,225	116,256	117,263	118,529	123,391	130,415
자본	57,213	74,448	85,575	103,240	115,425	131,675	147,195	166,918
이자비용	1,744	1,773	2,015	2,841	2,693	2,141	2,756	2,606
영업이익	10,483	9,140	13,783	17,006	15,825	14,872	16,268	17,265
당기순이익	6,593	10,709	11,281	13,064	15,097	18,141	14,328	13,495
교육훈련비	55	69	66	91	83	88	91	109
연구개발비	1,447	1,744	2,340	2,734	2,979	3,344	4,106	4,853

2015년 기준, 2차 협력업체에 속한 기업들의 매출액은 654.5억 원, 고용은 120명으로 나타났다. 2차 협력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고용이 사회의 통념보다 크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특정 품목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원청업체와 1차 협력업체에 동시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며,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납품처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비율은 1차 협력업체와 유사하지만,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은 22.0%로 1차 협력업체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자금 사정이 1차 협력업체들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1.8%로 1차 협력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표 10 〉 기업 재무정보(2차 협력업체)

(단위 : 백만 원,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체수	627	621	620	606	593	585	560	522
매출액	37,497	36,460	45,783	56,167	58,416	58,514	61,567	65,453
고용	108	108	107	109	110	111	113	120
자산	33,947	37,186	41,027	45,519	48,826	52,889	57,660	64,773
부채	17,967	19,764	21,060	22,812	24,038	24,847	26,874	30,124
자본	15,980	17,422	19,967	22,708	24,788	28,042	30,786	34,716
이자비용	622	645	636	665	703	637	614	613
영업이익	2,225	1,820	3,084	3,668	3,270	3,017	2,937	2,787
당기순이익	823	1,243	2,227	2,629	2,174	2,253	2,171	2,126
교육훈련비	18	13	17	21	19	21	17	17
연구개발비	596	545	747	829	816	960	986	1,149

2015년 기준, 제3차 협력업체의 매출액은 286.9억 원이며,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은 35.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구개발비는 1.8% 수준으로 1차, 2차 협력업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 〉 기업 재무정보(3차 협력업체)

(단위 : 백만 원,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체수	1,455	1,455	1,452	1,406	1,385	1,389	1,333	1,242
매출액	19,780	18,294	24,418	28,046	27,826	27,532	28,493	28,688
고용	63	63	63	63	65	64	65	68
자산	19,681	21,116	24,176	25,094	27,832	28,117	29,131	31,311
부채	10,927	11,739	13,651	14,328	16,263	15,566	16,067	16,953
자본	8,773	9,398	10,549	10,784	11,581	12,551	13,076	14,372
이자비용	431	427	508	525	610	547	524	518
영업이익	722	741	1,352	1,361	1,287	1,287	1,279	1,451
당기순이익	462	580	628	750	-110	1,125	209	1,049
교육훈련비	19	18	22	24	35	26	21	18
연구개발비	329	320	370	430	432	445	478	508

2.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가. 분석 모형

분석모형은 이병기(2012)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방법을 활용하였고, pooled OLS를 참고자료로 추가하였다.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A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을 분류하여 1차-2차-3차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기업들을 식별했고, 이러한 협력기업들의 매출성장·투자증대에 미치는 위탁기업 성장의 영향을 구체적인 변수로 포함하여 회귀 분석하였다. 패널 자료의 경우, 횡단면 자료와 달리 개별기업들의 시계열 자료가 포함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개별기업에서 관찰되지 않는 기업특유의 특성을 통제하였다.

한편, 패널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대상 기업에서 2개 이상의 거래정보가 있는 경우 하나의 거래관계로 식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개별 기업에서 다수의 거래관계가 식별될 경우, 다수의 위탁업체 중 거래금액이 가장 큰 위탁기업의 매출 증가율을 독립변수로 파악하여 회귀분석하였고, 특정 기업의 거래관계망이 원청업체를 중심으로 1차 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⁶⁴⁾로 동시에 식별되는 경우에는 회귀분석 시 거래관계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각 거래관계에 따라 거래금액이 가장 높은 거래 관계를 따르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시 거래관계 정보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관측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패널 분석에 활용한 협력관계는 시간 불변적 특성이 있어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협력관계 더미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지 않았다.

협력기업의 기업 성장식(매출 성장식)과 이에 활용한 변수의 현황 및 정의는 아래와 같다.

64) 원청업체의 1차 협력업체로 구분되는 동시에, 원청업체의 다른 1차 협력업체와 거래관계가 있어 2차 협력업체로도 식별되는 경우를 뜻한다.

▶ 분석에 활용한 식

$$Growth_{i,t} = \beta_0 + \beta_1 \ln Size_{i,t-1} + \beta_2 \ln Age_{i,t} + \beta_3 DTR_{i,t} + \beta_4 CF_{i,t} + \beta_5 LGS_{i,t} + \sum_{j=1}^2 \delta_j D_j + v_i + \epsilon_{i,t}$$

▶ 분석변수 현황⁶⁵

- 협력기업의 성장률(Growth) : 협력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 기업규모(SIZE) : 협력기업의 로그매출액, 기업나이(AGE) : 2015년 기준으로 협력기업의 창업일을 뺀 업력의 로그 값
- 부채변수(DTR) : 기업의 재무구조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부채구조를 나타내는 부채변수(DTR)를 활용
- 현금흐름(CF) : 협력기업의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에 지표가 매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 성장률(LGS) : 상위 협력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협력업체 더미 : 거래금액을 고려하여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로 구분

▶ 분석변수 정의

변수명	의미	측정
Growth _{i,t}	로그 성장률	ln(매출액) _{i,t} - ln(매출액) _{i,t-1}
lnSize _{i,t-1}	기업규모	ln(매출액) _{i,t-1}
lnAge _{i,t}	업력	ln(연도-설립연도) _{i,t}
DTR _{i,t}	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유동부채)/자기자본]
CF _{i,t}	현금흐름	당기순이익/총자산
LGS _{i,t}	상위 협력기업의 로그 성장률	ln(상위기업의 매출액) _{i,t} - ln(상위기업의 매출액) _{i,t-1}
D _j	협력업체 더미	1차 협력업체이면, D1=1 아니면 0, 2차 협력업체이면 D2= 1 아니면 0
v _i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관측되지 않는 기업의 특성	
ε _{it}	시간 및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변하는 임의의 교란항	

나. 분석결과

낙수효과 추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위 협력기업의 로그 성장률을 나타내는 LGS_{i,t}이다. ⁽⁶⁶⁾ 추정결과를 보면, 원청업체를 중심으로 1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효과는 계수 값이 0.651, 2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효과는 0.281, 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효과는 0.259로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Pooled-OLS 모형 역시 낙수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값의 크기는 고정효과 모형에 비해 크지만, 그 추세는 일관성 있게 관측되었다.

65) KED 통계 DB는 종사자 정보에 대한 관측수가 적어 표본 수가 과소되는 문제점이 있기에 종사자 관련 변수 미활용

66) 특정년도 거래 발생 시, 다른 연도에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협력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

〈 표 12 〉 A 산업의 매출액 증가에 대한 낙수효과 추정결과(고정효과모형)

변수명	전체	1차	2차	3차
lnSize	0.518*** (0.0238)	0.514*** (0.0564)	0.510*** (0.0316)	0.511*** (0.0319)
lnAge	-0.669*** (0.0327)	-0.759*** (0.0877)	-0.695*** (0.0418)	-0.645*** (0.0423)
DTR	3.03e-06 (3.07e-06)	-3.63e-05 (3.95e-05)	3.55e-06 (2.69e-06)	4.50e-06 (2.92e-06)
CF	8.54e-05*** (1.06e-05)	7.07e-05*** (2.26e-05)	8.58e-05*** (1.28e-05)	0.285*** (0.0454)
LGS	0.282*** (0.0187)	0.651*** (0.0488)	0.281*** (0.0183)	0.259*** (0.0209)
상수항	-6.457*** (0.324)	-6.492*** (0.749)	-6.271*** (0.426)	-6.337*** (0.423)
관측치	15,318	4,644	10,761	10,596
Overall R2	0.0359	0.0530	0.0431	0.0408
F-Value	957.92***	6483.51***	2693.92***	221.39***

주1: 변수별 ()는 강건한 표준오차이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주2: 분석기간 동안 한 번의 거래만 있으면, 거래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은 있다.

〈 표 13 〉 A 산업의 매출액 증가에 대한 낙수효과 추정결과(Pooled-OLS모형)

변수명	전체	1차	2차	3차
lnSize	0.0706*** (0.00560)	0.0930*** (0.0168)	0.0713*** (0.00715)	0.0633*** (0.00616)
lnAge	-0.138*** (0.0101)	-0.188*** (0.0338)	-0.150*** (0.0134)	-0.119*** (0.0114)
DTR	2.41e-06 (7.11e-06)	-3.32e-05 (6.17e-05)	2.37e-06 (7.19e-06)	5.93e-06 (4.29e-06)
CF	0.000306*** (1.17e-05)	0.000264*** (1.66e-05)	0.000309*** (9.47e-06)	0.478*** (0.0558)
LGS	0.383*** (0.0220)	0.740*** (0.0526)	0.378*** (0.0198)	0.345*** (0.0233)
1차 협력	-0.0592*** (0.0118)	-	-	-
2차 협력	-0.0157* (0.00824)	-	-	-
상수항	-0.702*** (0.0707)	-1.024*** (0.201)	-0.708*** (0.0893)	-0.674*** (0.0805)
관측치	15,318	4,644	10,761	10,596
Overall R2	0.0790	0.1023	0.0874	0.1149
Wald χ^2	2098.92***	16303.30***	3789.34***	548.34***

주 : 변수별 ()는 강건한 표준오차이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기업의 협력단계별 위치에 따라 파급효과의 크기가 상이⁶⁷⁾하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차 협력단계에 속할 때 파급효과가 가장 컸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2차 협력업체가 3차 협력업체에 비해 파급효과(매출액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대기업은 3차 협력업체에 속할 경우, 계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른 파급효과 크기를 보면, 동일한 1차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파급효과의 크기(=매출액 증가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3차 협력업체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가 생산 품목의 차이 때문인지, 가격교섭력 격차에 기인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표 14 〉 위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협력업체에 미치는 효과 (고정효과모형 · Pooled-OLS모형)

고정효과모형					Pooled-OLS모형				
구분	전체	1차	2차	3차	구분	전체	1차	2차	3차
기업규모 전체	0.282*** (0.0187)	0.651*** (0.0488)	0.281*** (0.0183)	0.259*** (0.0209)	기업규모 전체	0.383*** (0.0220)	0.740*** (0.0526)	0.378*** (0.0198)	0.345*** (0.0233)
대기업	0.320*** (0.105)	1.181*** (0.241)	0.202*** (0.0495)	0.291** (0.101)	대기업	0.356*** (0.135)	1.267*** (0.238)	0.214*** (0.0684)	0.265*** (0.102)
중견기업	0.734*** (0.0982)	1.142*** (0.0910)	0.462*** (0.120)	0.335*** (0.0996)	중견기업	0.821*** (0.0801)	1.111*** (0.0819)	0.572*** (0.0904)	0.466*** (0.0755)
중소기업	0.269*** (0.0188)	0.584*** (0.0506)	0.272*** (0.0187)	0.253*** (0.0212)	중소기업	0.372*** (0.0222)	0.683*** (0.0537)	0.373*** (0.0203)	0.341*** (0.0238)

주 : ()는 강건한 표준오차이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기인한 파급효과는 협력단계가 길어질수록 약화된다. 그 이유는 원청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1차 협력업체의 매출액 증가로 귀결되는데, 1차 협력업체의 상대수는 원청업체와 전속거래관계 또는 원청업체의 매출액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협력업체는 원청업체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2차 협력업체 역시 1차 협력업체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차 협력업체의 경우, 1차 협력업체 외에 다른 거래처와도 연결되어 있어 원청업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청업체의 매출액 증가가 1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약한 수준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반영하여, 비중을 계산하였다면 3차 협력업체에 대한 파급효과의 크기는 대

폭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⁶⁸⁾

3. 기업별 통계를 활용한 낙수효과 분석의 한계와 시사점

기업별 통계를 활용한 낙수효과 분석은 정책적으로 많은 유용성을 지닌다. 통상 대기업, 중견기업이 1차 밴드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2차 밴드 이하의 거래단계에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단계별 낙수효과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반성장정책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는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와 외상결제 등이다. 신용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재무 통계에서 재무정보, 거래관계, 거래형태(구매와 판매), 거래액, 대금결제형태 등 기업간 거래관계 정보가 매년 갱신될 경우,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성 및 거래관계의 형태 등 미시적 낙수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평가기관 기업재무통계 만으로는 낙수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 거래관계 조사 자료를 매년 갱신하는지, 자료제공 시점과 실제의 거래관계 사이에 얼마나 시차가 존재하는지, 또한 기업들이 거래관계 정보를 얼마나 기재하면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도 기업간 거래관계의 조사항목에서 거래금액, 거래비율, 거래기간, 현금결제비율 등의 정보에 공란이 많기 때문에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들의 필수기재사항인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만, 선택적 기재사항인 고용,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비율, 현금결제비율, 외상결제비율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미흡하였다. 보다 엄밀한 거래관계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계 DB의 보완이 필요하다.

V. 결론

이 글은 낙수효과에 대한 개념,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시대적 환경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낙수효과라는 용어가 신조어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경제학 이론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신자유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그 반대의 논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과 양극

68) 표한형(2016),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화가 쟁점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역시 낙수효과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으나 낙수효과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낙수효과의 실제적 크기를 분석하는 작업 또한 개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분석 틀을 살펴보고, 미시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2차적인 목적이 있다. 거시적·산업별 분석기법을 활용한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낙수효과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시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기존 연구결과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낙수효과의 크기는 거래단계가 길어질수록 약화됨을 알 수 있다. 다만,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거래관계 분석에 필요한 통계DB가 강화되어야 하는 데, 이 부분은 정책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향후 과제로 남겨 둔다.

〈부록〉 기존에 진행 중인 실태조사 자료

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실태조사』를 통해 ‘수·위탁 거래’ 현황을 파악⁶⁹⁾하고 있다. ‘수·위탁 거래’란 1년 동안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의 정기적·지속적인 직접 및 간접 위탁(납품 주문)에 따라 ① 부품 또는 반제품을 생산하거나, ② 위탁기업이 판매할 완제품을 조립 또는 제조하거나, ③ 원재료를 가공 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판매, 구매거래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요조사 내용으로는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에서 직·간접 위탁을 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했다면, 귀사는 최초의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몇 차의 협력거래 단계(=벤더(3차 벤더까지 조사)=수탁기업) 입니까?”라는 질문이 있다. 그 외에도 귀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한 위탁기업(모기업)의 개수와 납품액, 위탁기업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위탁기업 수, 위탁기업 납품액, 귀사가 위탁기업(모기업)에 납품한 제품의 형태(단일부품, 중간부품, 완제품)별 납품액 비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응답결과를 보면, 1차 벤더가 가장 많고, 3차 벤더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역삼각형 응답구조로 인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힘든 구조이며, 거래처의 기업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사결과를 낙수효과 분석에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나.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의 경우, 크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로 구성된다. 통계 분석은 수록된 기업 D/B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9)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중소기업통계 설명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구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대상(주체)	대기업(공정거래위원회)	1·2차 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평가시기	매년 1회(1~5월)	매년 2회(8~12월, 1~5월)
주요 평가 항목	1. 협약내용의 충실도(30점) - 협약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 정도 -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2. 협약내용의 이행도(70점) - 협약상 공정거래,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 정도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실적	1. 거래관계(40점) - 불공정 거래 -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 2. 협력관계(30점)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혁신, 인력개발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3. 운영체계(30점)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환경조성 등
	○ (가점)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 기간연장, 재협약, 협력사 지원 등 ○ (감점) ①하도급법 위반 등 -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시 ②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 임직원 비리 등	○ (가점) 적합업종 준수,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동반성장 확산 활동,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 등 ○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위반 행위 시 등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해당 통계와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는 구축된 D/B의 정보량과 주요 지표에 대해 공개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부분이다. 특히, 매년의 거래관계가 변경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하므로, 응답자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결제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이란, 2차 이하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대기업·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대기업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 거래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2·3차 거래기업에 결제를 하거나 은행에서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0여 개의 시중은행들이 참여하는 결제 시스템으로서 제조업 이외에는 활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으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매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집계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으며, 월별, 분기별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상생결제시스템 통계 DB는 2015년 하반기 통계부터 집계되어, 2017년 가을에는 2년 치 데이터가 확보되었으며, 거래액은 111조 9,460억 원(17.03.31 누적)이며, 290개의 구매기업과 131,129개 거래기업

이 약정⁷⁰⁾을 체결한 바 있다. 통계 DB는 2년 치에 불과하지만 신용평가기관의 재무통계 자료를 결합하면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다만, ① 통계의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성장위원회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②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의 고유 식별번호 및 거래 업체명,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품목 등의 명시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③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통계이기 때문에 분석에 활용 가능한 지표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70) 거래기업 약정 수는 기업 및 은행 간 중복 약정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1. 김근수(2014), “재벌의 실태와 경제적 파급효과”, 『經濟發展研究』, 제18권 제2호, pp. 37-64.
2. 김민주(2011),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 법칙 101』, 위즈덤하우스.
3. 김은지·서영경(2013), “아베노믹스 국가전략특구 구상의 주요내용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박상용·신현한·홍은주(2013), “협력사의 성과에 관한 연구 : 삼성전자 협력사를 중심으로”, 『경영연구』, 28(3), pp. 281-309, 한국산업경영학회.
5. 박승록·최두열(2011), “대기업 투자의 적하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29(4), pp. 207-235.
6. 신현한·김소연(2014), “대기업 협력업체의 성과분석 - 4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 pp. 1-93, 한국경제연구원.
7. 심상규(2011),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비율과 수익성 간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제33권 4호, pp. 159-176.
8. 이병기(2012),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 분석 - 자동차·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pp. 1-62, 한국경제연구원.
9. 이용호·김재진(2017. 5), “대·중소기업간 생산파급효과 분석 - 낙수효과의 분수효과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제1차 산업연관포럼 발표 자료.
10. 이종욱·오승현(2014), “대기업 성과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네트워크론 자료를 이용한 낙수효과 실증분석”, 『금융지식연구』, pp. 141-162.
11. 이진면·이용호·김재진(2016), 『2013년도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과 분석』, 산업연구원.
12. 이한영(2016), 『너 이런 경제법칙 알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경제학 키워드 100』, 21세기 북스.
13. 조동근·빈기범(2014), “처리량 반응 분석에 의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낙수효과의 존재에 대한 제한적 증거”, 『국제경제연구』, 20(3), pp. 25-35, 한국국제경제학회.
14. 표한형(2016),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15. 한국경제연구원(2017),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7년 3/4분기”, 한국경제연구원.
16. 한국은행(2016), 『2014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17. 홍성철(2016),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18. 홍장표·장지상(2015),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 생산·고용 유발효과를 중심으로 -”, 『경제발전연구』, 제21권 제2호, pp. 33-62.
19. Abel, A., G. Mankiw, L. Summers, and R. Zeckhauser(1989), “Assessing dynamic efficiency: Theory and evidence,” *Review of Economic Studies*.
20. Auerbach, A., and J. Slemrod(1997),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ax reform act 1986,”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1. Card, D. and A. Krueger(1994), “Minimum wage,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4.
22. Capron, H. (1992), “A State of the Art of Quantitative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R&D Programmes”, in M.T. Khalil and B. Bayraktar (eds.), *Management of Technology III*,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Press, pp. 1195-1204, Georgia.
23. Carr, E. H. (1964),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London: Macmillan.
24. Era Dabla-Norris, Kalpana Kochhar, Nujin Suphaphiphat, Frantisek Ricka, Evridiki Tsounta (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pp. 1-39, IMF.
25. Feldstein, M. (1995), “The effects of marginal tax rates on taxable income: A panel study of the 1986 tax reform ac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3, No. 3, pp. 551-572.
26. Hines, Jr. J. R. and L. H. Summers(2009), “How Globalization Affects Tax Design,” NBER working paper.
27. Stiglitz, J. E. (2006), 『Making Globalization Work』, W.W. Norton & Company, pp. 133-159.
28. OECD(2015), 『Better Policy Korea』, OECD.
29. Peneder, M. (WIFO), “Creating a coherent design for cluster analysis and related policies-Austrian TIP experience”, OECD, 1997. Nov. ; Alex

- Hoen, “Three variation on identifying clusters”, OECD(www.oecd.org/sti/inno/2099308.pdf).
30. Phillips, K.(1990), 『Politics of Rich and Poor』, Random House.
 31. Piketty, T. and E. Saez(2006), “The Evolution of Top Income: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6, No. 2, pp. 200–205.
 32. Rajan, R. and L. Zingales(2003),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Crown Business』, New York.
 33. Woodward, B.(1994), The Agenda: Inside the Clinton White House, Simon & Schuster; Reissue edition (April 19, 2007)
 34. OECD(2014), 『特集:格差と成長』, p. 4, OECD.
 35. 國枝繁樹(2007), “最適所得稅理論と日本の所得稅制”, 『租稅研究』, pp. 69–82.
 36. _____(2009), 「オバマ政権の稅制改革と日本への含意」, 『租稅研究』, Vol. 718, pp. 23–38.
 37. _____(2014), “わが国の財政問題と金融システムへの影響”, 金融調査研究会報告書.
 38. 内閣府政策統括官(2001), “1990年代における所得稅制改正の効果について”, 『政策効果分析レポート』, No. 9.
 39. 大竹文雄(2010), “競争と公平感-市場經濟の本当のメリット”, 『中公新書』, 中央公論新社.
 40. 藤田安一(2015), “安部「成長戰略」による「地方創生」の特徴と問題点”, 『地域學論書』, 第11卷, 第3号.
 41. 飯田泰之・田中秀臣・麻木久仁子(2015), 『「30万人都市」が日本を救う! (中國版「ブラックマンデー」と日本經濟)』, 藤原書店.
 42. 山田久(2012. 7. 18), “「市場主義1.0」がもたらした不可逆的變化 サッチャー, レーガン, 小泉改革の意味”,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43. 上村未緒(2013), “日本再興戰略の特徴と今後の課題”, 『みずほインサイト政策』, みずほ總合研究所.
 44. _____(2014.8.8.), “實行段階に入った國家戰略特區”, 『みずほインサイト政策』, みずほ總合研究所.
 45. _____(2015), “動き始めた地方創生特區”, 『みずほインサイト政策』, みずほ總合研究所.
 46. 野田彰彦(2013.), “4年ぶりに復活した骨太方針~求められる財政健全化に向けた 具体策

- と仕組みづくり～”, 『みずほインサイト政策』, みずほ総合研究所.
47. 長谷川幸洋(2014.9.12.), “安倍首相のブレーン浜田宏一内閣官房参与に聞く「消費増税と法人税引き下げの行方」”, 現代ビジネス.
 48. 田近榮治・八塩裕之(2005), “税制制と事業形態選擇－日本のケース”, 『財政研究』, 第1巻, pp. 177-194.
 49. 田中史郎(2016), “戦後70年日本經濟の軌跡－日本經濟の歩みとこれから－”, 『人文社會科學論書』, No. 25, pp. 47-61.
 50. 田中信孝(2015), “日本經濟の動向と發現が困難な「經濟の好循環」”, 『自治總研通卷』, No. 441, pp. 32-50.
 51. 中野剛志(2012), “レジーム・チェンジ－恐慌を突破する逆轉の發想”, 『NHK出版新書』, NHK出版.
 52. 下村恭民・辻一人・稻田十一・深川由起子(2009), 『國際協力 新版－その新しい潮流』, 有斐閣.
 53. 주한미국대사관, ‘Great Society(위대한 사회)’ 정책 (검색일: 2017. 11. 20).
 54. 톰슨 로이터(2015), “トリクルダウンでなく、經濟の好循環目指す＝安倍首相”, 2015. 1. 28, <https://jp.reuters.com/article/abe-economy-idJPKBN0L10CT20150128> (검색일: 2017. 11. 16).
 55. 한국기업데이터 DB
 56.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60&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17. 10. 6)
 57. Boskin, M. (2009), “Obama’s radicalism is killing the Dow,” Wall Street Journal, 2009. 3. 6, <https://www.wsj.com/articles/SB123629969453946717> (검색일: 2017. 11. 21)
 58. Keller, J. (2015), “The IMF Confirms That ‘Trickle-Down’ Economics Is, Indeed, a Joke”, 2015. 9. 18, <https://psmag.com/economics/trickle-down-economics-is-indeed-a-joke> (검색일: 2017. 11. 16).
 59. Krugman, P. (2000), “Reckonings; The Two Larrys”, New York Times, 2000. 11. 19, <http://www.nytimes.com/2000/11/19/opinion/reckonings-the-two-larrys.html> (검색일: 2017. 11. 21)
 60. The 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TPC) 홈페이지 (검색일: 2017. 11. 21).

61. 飯田泰之(2014), “景氣回復を實感する年に一カギ握る成長戦略の成否”, 『第三文明』, 2014년 2월호, <http://www.d3b.jp/politics/3219> (검색일: 2017. 11. 21).
62.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2014), 리베랄で經濟も重視したい有權者は 一体 どうしたらいい? 『日本經濟はなぜ浮上しないのか』, SYNODOS, 2014. 12. 7, <https://synodos.jp/newbook/11952/2> (검색일: 2017. 11. 21).
63. 스포니치, “流行語大賞の候補50語発表,” <http://www.sponichi.co.jp/entertainment/news/2014/11/19/kiji/K20141119009312190.html> (검색일: 2017. 11. 21).